

집에서 받는 의료·돌봄...삶의 질 높이고 의료비 줄어

광산구 '재가 의료급여사업' 성과 장기입원 수급자 66명 일상 복귀 호남대 '라운 서포터즈' 지원 나서

지난해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온 김모(78) 씨에겐 '젊은 친구'가 생겼다.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라운 서포터즈'다. "대학생들이 집에 찾아와 말벗을 해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어요. 이리저리 이사 다니느라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앨범이 세 권이나 생겼어요."

김씨는 뇌졸중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 오래 입원 생활을 했다고 한다. 몸이 안 좋고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생활하는 건 염두가 나지 않았던 그였지만 "집으로 돌아 가지"는 큰 결심을 한 건 광산구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 덕분이었다.

이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아도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게 핵심으로, 광산구는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의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광산구와 호남대학교가 업무협

을 맺고 추진하는 '마실가세' 사업을 통해 '라운 서포터즈' 대학생들을 대상자들과 연결해 건강관리, 동행 산책, 자연 보호 활동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상회복을 돕고 있다.

김씨는 "퇴원을 망설였으나 병원에 찾아온 의료급여 관리사와 상담하면서 광산구의 좋은 사업과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냈다"며 "병원 밖 일상의 즐거움, 행복을 되찾으면서 병원에 있을 때보다 몸도 훨씬 건강해졌다"고 만족해 했다.

광산구는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퇴원 후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대상자들의 만족도도 높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만족도 조사 결과, 82.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광산구의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광산구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대상자 의료급여 지급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대상자 총 66명의 진료비 지출은 관리 시작 전 13억 원 규모에서 관리 시작 후 5억 원 수준으로, 무려 61.3%(8억 3699만 원)나 줄었다.



호남대학교 간호학과생으로 '라운 서포터즈' 소속 대학생이 최근 광산구 '재가 의료급여 사업'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정서 안정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광산구는 "지난 3년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우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활력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면서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하고, 경증 환자, 사회적 입원자는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올해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지속하고,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모델을 개발해 향후 건강보험 대상자 등 다른 영역으로의 사업 확대를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더 많은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상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박해원 광산구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감사패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1·2동·사진)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침체한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전남 지구상인연합회(회장 박형국)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남지구상인연합회는 박 의원이 발로 뛰는 소통으로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골목상권에 희망을 불어넣고자 노력해준 것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해에도 광주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기성)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초선 기초의원이자 제9대 광산구의회 전반기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2022년 7월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특히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지난 제274회 정례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남1동 내 유희공간의 도시디자인을 개선하고 미관광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제276회 임시회에서는 광산구 고항사랑기부제 성공 방안으로 답례품 개발 및 확장 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해 공감을 이끌어 냈다.

박 의원은 "골목상권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펼쳐온 분야로,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자 했던 노력이 통한 듯 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더불어락(樂) 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비전 선포

광주 광산구 산하 더불어락(樂)노인복지관은 "지난 26일 '세상과 사람이 있는 더불어락! 함께해요 선배시민!'을 구호로 2024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110명으로 구성됐으며, 문화예술 공연봉사단 90명,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학습, 배움 활동을 하는 교육봉사단 20명 등이다.

이날 행사에선 2024년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올해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연봉사단과 교육봉사단(산소방앗간) 활동 홍보관과 자원순환 홍보·체험관 등도 성황리에 운영됐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광산구의 '우리동네 100개의 마을복지관' 활성화 등을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관장은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이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이로운 도움을 주는 다양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군소음 피해, 같은 아파트도 보상 제각각...직장인 피해는 외면

광산구, 피해보상 주민회의 개선 요구 봇물...정부에 적극 건의

"전투기만 뜨면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힘든데, 우리 마을 23가구 중 4가구만 보상받아요."

"집은 다른 지역에 있지만 17년째 소음피해가 심한 직장인입니다. 저 같은 직장인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광주 광산구가 지난 26일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과 연계해 진행한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에선 보상 관련 각종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날 주민회의는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22년부터 이뤄진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2025년 예정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를 대비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100여 명 주민이 참석했으며, 광산구는 지역 내 군소음 피해보상 현황과 2020년 1차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 주민들은 "피해보상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흥동 사는 주민은 "바로 앞에 비행기장이 보이는데 정작 보상을 못 받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구청에서 '군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를 진행했다. <광산구 제공>

했으며, 우산동의 한 아파트 입주주민은 "같은 아파트인데 동마다 보상 기준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거주지만 보상 기준으로 해 소음 피해지역 내 직장인은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광산구에 살지만 직장이 타 지역이어서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한 주민은 변동 사항이 없음에도 해마다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소음이 실제 주민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건강검진을 1년마다 시행해 이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제안도 공감을 얻었다.

이날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경청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재 군소음 피해보상 기준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원천적으로 균형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주민의 목소리를 국방부에 전달해 당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재 광산구는 송정1동,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신창동, 동곡동, 평동 일부 등 8개동이 '소음대책지역'이며, 2022년부터 매년 2만 8000여 명이 80여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수목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상담문의: 062-449-4446